

# 송영길이 쏘아올린 ‘탈원전’ 여야정쟁... 공론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자력·화력발전 중단 검토해야”  
靑 “송의원 주장, 이미 정리된 사안”  
野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

청와대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야권이 가세하는 형국이 갖춰졌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권 발 불협화음은 여야 정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여권발 탈원전 정책 이견 표출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본격화됐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



미세먼지로 뒤덮인 국회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거처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

들었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송 의원은 청와대 주장을 재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운을 뗀 후 “(다만)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조

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신규 원전이라도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지가 70%인 국토에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김 대변인이 주장한 공론화위 관련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된 위원회다. 신한울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탈원전 기조 유지를 언급한 청와대에 송 의원이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야권도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우리 탈원전 정책은 반환경 정책”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총광 청와대 교수 초청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안 바꾼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탈원전 정책 공론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탈원전 행보에 민주당은 견제구를 던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나 원내대표 발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여권발 탈원전 정쟁이 여야정쟁으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탈원전 정쟁 관련 여론 반응 살피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원전 정쟁은)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확답을 피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 황창규 “화재 피해상인 적극·전향적 보상”

(KT 회장)

과학기술방송위, 보상 등 질타  
“소상공인 피해 보상규정 없어  
방화·테러 가능성도 염두해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회장은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한 통신구나 전신구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부실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 회장이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이후 예방조치 미흡, 통신구 관리감독, 사후 보상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이번 통신구 화재사고가 기반시설을 마비하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AT&T는 배상금을 산정할 때 중재합의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원하고 영국의 브리티시텔레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과 황창규 KT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콤은 추가 보상 청구도 허용한다”며 “이번 사고 기간 동안 소상공인 평균 결제액이 줄었지만 이를 보상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통신 시설에 등급 조치가 있었고 관리도 되지 않았다”며 “손해액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데 약관에 따라 청구에 의해 협의해 배상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피해지역에서 한 달 넘게 직원들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듣다”며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만큼 보상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openness 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했다.

통신구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PD수첩’의 방송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에 차 있고 정화조와 연결되기도 했다”며 “시설 점검을 위해 물을 양수기로 다 퍼내야 하는데 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은 실적 위주의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통신 케이블을 예시로 들고 “현장에 있는 케이블과 같은 것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강한 화력에서도 잘 견디더라”며 “이 정도 화력을 견디는 난연 케이블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방화나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T가 5G 앞선다고 하는데 5G 시대에 이런 IT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전반이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회장은 “맨홀과 전신구는 KT가 책임지고 직접 관리한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명인 장관은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피해가 삶 전체, 국가 시스템까지 가는 만큼 통신 3사와 직간접 보상·배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관한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의 자료가 부실하고, 전체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산업부 전국 7개도시 순회 산업정책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부터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며 올해 산업정책을 설명하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제조업 혁신, 규제샌드박스, 수출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역 주력 산업과 관계가 높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지원 전략 및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광역협력권 산업육성, 산업단지 혁신 등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

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R&D) 등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김치 수출 20% 증가... 1억 달러 육박

농식품부, 작년 9750만 달러 기록  
68개국에 수출... 日 수출 23% 증가

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약 2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이 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수출액은 9750만 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국가수도 2017년 63개 국에서 2018년 68개 국가로 늘었다. 특히, 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00만 달러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그다음으로 미국, 대만, 홍콩, 호주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가디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소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김치페스티벌’과 한국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청 신규공무원과 어린이들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김치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록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는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마트·상점·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실태 점검

산업부, 설 앞두고 물가안정 앞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상점·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점검반은 설 제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

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